

노원,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



성명고등학교에서 몇몇 교사들이 '아이스마트키퍼'를 통한 학생 스마트폰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이스마트키퍼는 학생들의 스마트폰에 깔린 앱 사용 권한을 모두 학교에 넘겨버리는 앱이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앱-기능을 설정하면 학생들은 그 시간대에 해당 앱-기능을 쓸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생활할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이 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과연 성명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처럼 아이스마트키퍼를 중단하려 할까?

결말이 좀 이상한 강제 섣다른제 폐지에 대한 몇 마디

필부

강제적 섣다른제 폐지가 필부일함 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성민 씨가 7월 7일,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성민 씨는 '강제적 섣다른제' 대신 '선택적 섣다른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며, '인터넷게임 중독' 대신 '인터넷게임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붙 것을 주장했다. 반면 게임산업진흥법안은 '김성민 씨는 게임 업체를 이해하기가 대단하다는 뜻만 해주는 것이고 있으나 법안의 실질적인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제대로 된 변화를 추구하며 해당 법안에 대해 현재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차 그려면 우리는 어떻게? 같은 강제 섣다른제가 없었더라 김성민 민선 하던 때는 길까?

근대 말야, 한국에는 술꾼 전이 어...!

옛날, 두발규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할 때의 얘기가. 그 때는 모든 학생들이 '두발자유'를 친파 앞선 원칙 간절히 요구했다. 그러자 윤희만 교육부가 두발자유'을 제시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전부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생의 머리 길이를 일괄음 규제할지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얘기가.

학생들은 온반야 빠졌다. 이긴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드디어 두발자유를 향해 일 보 친 경향에 반대해야 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학생의 머리는 모두의 주장을 듣고 주장을 보일 일이 나온다. '선택적'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 '통제를 풀' 여지를 주는 것? 분명히 여지가 있었다. '두발자유'가 시행되었지만 학생들은 두발규제를 마음 없이 없앴다. 오히려 두발규제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학교 구성원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라는 명분만 주는 꼴이 되었다.

청소년 인권동아리 화아



부원을 모집합니다!

학생 생활보단 앞서서적이 먼저인 학교에 지쳤다면? 교내 활동사항을 뒷담화만 하는것이 싫다면? 청소년 때만 주인공을 요구하는 학교가 짜증나다면? 진지하게 토론하고 시원하게 복구하고 화끈하게 대안을 마련해보자! **화아에서!** 대성·노원구에 사는 학생, 청소년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환영해요~

연락처 : 010-4083-4987(whaya)
사이트 : http://cafe.naver.com/hwaya

노원을 함께 인생을 살려다 중시비행기



결말이 좀 이상한 강제 섣다른제 폐지에 대한 몇 마디

7월 7일, 강제 섣다른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선 이 개정이안이라서, 주목하거나 좋은 일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 헌법이 바뀌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겪었던 부당한 일들, 회사는 일들을 알려주세요.

캐뻬 : http://cafe.naver.com/hwaya ~ [함박민희] - [인권쟁이 신고합니다.]
키워드 : whaya19@naver.com
전화 : 010-4083-4987

박제당한 분노



[필부의 인권이거로]

학생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달라

필부

제목을 보면 뜬금없이 왜 '권리'를 요구하는 거지?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의 문화를(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더디하다. "공부하기 싫으면 학교 그만둬라" 라는 말을 아무렇게나 던져 내는 교도도 있다. 시키는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을 손쉽게 상 수 있다. 학원도 비싸고 강압이다. 온라인으로도 공부할 위한 정보의 사이트가 넘쳐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은 공부받을 권리 자유를 결정할 수 있을까?

오히려 학생들은 지나치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정하는 경지도 모른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지 학교, 학원, 과외 등을 다하게 해준다. 교사들은 고생고생해야지 아직 강도를 저지른다. 한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리나, 오히려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막을 배양되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이 줄어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권리는 의무의 다르다. 권리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있지만, 의무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다. 꼭 권리로 고 충고 관한 것일 이유는 없다. 또한 꼭 의무라야 나쁘고 힘든 것일 이유는 없다. 예를 들어, 만 19 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는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지만 투표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는 번거롭거나 나쁜 일이다. 역으로 투표하지 않으면 투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말미마나 평안 김사도 제 스스로 그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들에게 진정한 수학여행의 자유를 달라!

레노



수원이나 수학여행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 여기서 '수출한 주객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다. 300명 가까운 희생자를 낸 세월호에는 대부분 수학여행을 온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타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은 수학여행에서 돌아지 못한 채 추운 바다 속에서 죽어가야만 했다.

고등학교시절을 겪어본 사람들이 누구나 한번쯤 '수학여행'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웃고 놀았던 잊지 못할 학생시절의 에피소드 그도 이런 '수학여행'에서 만들어지곤 한다. 그 정도로 '수학여행'의 추억은 상당히 두터다. 하지만, 수학여행이 꼭 모든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인 것은 아니다. 어쨌든 방문 '여행'이라는 상황을 곤란하게 만드는 신체적인 짐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다.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학생들과 재수 없게 같은 버스를 타는 학생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합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성소수자 학생도 있다. 학교는 그들의 대답을 인정하지 않는다. 밀리버 해서 수학여행에 빠지고 싶다면 교수에게 찾아 온 학생에게 '조금만 참아라' '평생에 한번뿐인 소중한 추억이다' 하며 어떻게든 수학여행이란 우리 속으로 밀어내버린다. 학생들에게 있어 '수학 여행'은 즐거운 선택이 아닌 강요일다. 강제로 보내버리는 식의 우시한 강요는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학교의 화합식적인 구조가 만들어낸 '암묵적' 강요였다. 모든 학생들의 생각이 또 다를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지평적인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수학여행 강요'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기본 마음을 품고 배고 올라갈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분명히 소수의 '별로 기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이다. 단원고등학교 뿐만이 아니다. 어느 학교든 간에 수학여행에 가기 싫은 학생들은 필히 존재한다. 이제는 학교가 그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박제당한 분노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에게 여전한 차별들..

다민



총통소녀 : 한-미 FTA 협상 과정이 논란이 되었던 2008년, 가장 먼저 총통소녀를 느끼게 된 학생들을 들고 나선 10대 청소년을 나타낸 캐릭터. 총통소녀는 총통시와 집회가 이어지면서 '보통아! 할 대상' '대견한 어린이'의 상징으로 변질되었다. 그 과정에는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인 시선이 녹여있다.

가 어른

- 대한민국에서 스무살이 된다는 것의 진짜 의미

아리

사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예전부터 이어져 왔다. 법원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하위 법규인 집시법에도 집회는 신고제로 운영되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자유를 집회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여 신고한 집회를 취소시키고 미신고 불법 집회에 참가자를 연행하고 제동(법학상의 중가사건)을 적용하는 등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내규에 따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15세 이상으로 몰려서 보아야 하며 시위대에 직접 참가해서는 안 된다. 규정되어 있음에도 몰래투를 조직하거나 회원제를 이용해 들어본다. 1인 시위는 신고 대상조차 인정되지 못하자 경찰 여러 명이 시위자를 폭력한다. 심지어 신고된 집회도 자기를 밀어 안 들면 해산시킨다. 이는 집시법 3조 1항 '누구든지 폭력, 위협,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조항을 위배하는 것인데도 경찰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위법행위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한다.

이렇듯 우리나라에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청소년의 집회참여에 대해서 이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집회참여에 나타나는 지나치는 사람들은 "학생이 공부하야 할 것이지" "너 선동당 만 거야" 라는 식으로 청소년을 무시하게 일어난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공부만 하는 존재도 아닌 존재도 아니다. 교과서에서는 전 국 민의 참정권을 인정하고 정치참여를 권유한다. 또 뉴스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중의 정치투표권을 말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청소년이 집회하는 직접 참여하는 정치 방식에 동참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도 집회가 뭐 하는 곳이지 잘 모르고, 하지만 사람들은 청소년들에게 '여기가 뭐 하는 데를 알고 나온 거야?'라고 묻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무조건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19살에서 20살이 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손이 나타나서 온갖 권리와 지식과 성숙함을 안겨다 주는 줄 아는 모양이다. 심지어 같은 집회 참가자들도 서로 '학생이 공부하러도 바빠서 기뻐한다.'라거나 '학생들끼리 지 지러로 나가게 해 미안하다.' 라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생각도 '정치적투표도 미성숙하고 보보일어 할 나이가 될 때까지 어...!' 라는 시각에서 발생한 것이다. 자기 의지로 자기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왔는데 무엇이 기뻐하고 무엇이 미안한가? 이유는 단지 청소년들이 여자가 때문이다.

만민은 평등하며 알 그대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나이는 사회적 경험과 지식의 척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아니다. 교사의 제명이 부당하다며 피켓을 드는 학생도, 갑작스런 해고에 평등 해본 해를 하는 노동자도,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뿐이다.

안전은 우리의 권리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리호 공헌

세월호 참사 이후, 사람들은 다시 '안전'을 말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안전교과를 신설한다.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등 여러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참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일까? 이런 온갖 대책은 현실집처럼 보이지만 한다.

안전할 권리는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숨을 잃거나 다칠 수도 있다. 안전할 권리를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위험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 조치를 받을 권한, 안전하고 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할 권한도 포함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안전'이란 말을 쓸 때는,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실리'인지 의문을 품게 된다. "안전을 위해 아이들의 위치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앱을 사용하게 한다.", "안전을 위해 초저층 검사 를 해야 한다.", "화재도 안 되고 야간동공시장을 찾아 한다." 심지어 방송까지 학교에서 야간자율학습을 강제로 시키는 것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까지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안전은 권리가 아니라, 정작 우리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른들은 종종 가을 청소년을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고 한다. 그러나 폭력 때문에 집을 뛰쳐나온 청소년에게는 가정이란 폭력과 안전을 위협당하는 공간이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학교나 학원도, 학생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곳도 아닌가? 처벌을 기하고, 학생의 폭력과 괴롭힘을 묵살하는 학교의 모습은? 학생이 아프다고 해도 기업을 의상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학교는? 그런 우리의 경향을 외면하는 안전은 온전한 안전일 수 없다. 또한, 안전을 이유로 우리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어

른 문제이다. 안전은 우리가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지, 삶의 목적 자체가 아니다. 안전을 내세워서 우리를 통제하는 권력은 역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게 한다.

내가 바라는 안전은 인권으로서의 안전과 자유는 충돌하지 않는다.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때 더 안전하지 않다, 차별이나 폭력에 의해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평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더 안전해진다. 안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상황과 명령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고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이 안전 이고 무엇이 위험인지, 평등하게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권력자의 편의나 이윤보다 안전을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고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월호 사건은 '학생인권'의 존재는 아니지만, 세월호에 있던 이들의 인권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배가 안전하지 않게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잘 대처하도록 할 것을 다하지 못했음도, 인명을 구조하는 데도 유력했다. 안전을 신뢰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정부의 문제에 신경 끄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안전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무를 지르라는 의미이다. 학생들에게 뛰지 말라고 욕박치고 감시하는 학교가 아니라, 뛰다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고 특목 학교 일어난다는 운동장을 만들고 안전 장비를 챙겨주는 학교가 더 낫다. 넘어져서 좀 다쳐도 누구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학교다. 사고의 책임을 따지는 학교나 학생에게 돌리기도 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그 피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만드는 학교가 훨씬 안전하고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학적행동 보충하기보다는, 학교가 젊은이들을 위한 안전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정부와 학생들의 역할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안전할 권리'의 적절한 실현 방법이다.

평소에 쓰던 말에 고민 덧붙여보기



학교폭력?

학생간 폭력!

미성년자?

아동·청소년!

~세!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만을 학교폭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의 폭력만을 가지고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책임 역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폭력 문제라는 것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인'은 어도다(성), 사람 일(인) = '다 이루어지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19세가 넘지 않았어도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장래가 있다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미래가 없다고 불완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불완전하지 않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세!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세'로 부르는 반면 어린 사람은 '~군'~'양'으로 부를까요? '~군'~'양'은 일제 강점기 때 전했던,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이 다양한 칭칭을 배제하고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같이 구분하지 말고, 그냥 모든 사람을 '~세'로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중시비행기> 2호 기사 수정에 대한 안내

<중시비행기> 2호를 읽는 한 독자들은 기사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화아>에서는 그 의견에 대해 고민하다가, 그 의견에 맞춰 배포 있던 <중시비행기> 2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의견과 수정된 기사 내용은 화아의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hwaya>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문에 대한 소중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신문에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